



12면

익산시, '1시민 1미술' 시대본격화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7월 4일 화요일 (음 5월 17일) 제3297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정책포럼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개 특자시·도 “새 지방시대 선도”

〈전북·제주·강원·세종〉

전북도 등 상생협력 협약식·특별자치분권 정책포럼

지방수도 균형발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
도, 특별법 194개 제도개선 과제 마련 설명활동
국회 토론회 등 연내 개정 위한 입법 활동 병행

전북도는 3일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특별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관영 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 500여명이 함께 했다.

그동안 4개 특별자치시도는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자부심으로 지난 2월부터 제주·전북·강원을 순회하며 실무협의회를 열고 협력 활동을 논의하며 이번 협약을 준비해 왔다.

준비과정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제주도는 2년간

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가 풀려 그간의 성과를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2부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인기 제주대 교수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자치시·도 관계자, 4개 특별자치시·도 연구원장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 시·도는 지방수도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체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도 오고 가는 등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은 법 전부개정이라는

힘난한 압박 과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시도의 연대 협력을 통해 중앙 부처의 방어적인 태도를 전환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4개 특별자치시도는 ‘특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지·응원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난제였지만, 제주·세종·강원·전북이 함께 상생협력한다면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특별법 194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회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연내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오는 13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어,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순항’

임실군의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군은 최근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심 민 군수와 김화모 한국지자체경제연구원장 등을 비롯해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체험하며 전시, 쇼핑, 숙박 등을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복합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하며 국가 예산 50억원을 이미 확보했고,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85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12월까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와 파급효과 분석과 세부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다.

이에 먼저 8월에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 총 70억원을 투입해 오수의견관광지 정비와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을 추진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소공인 자생력 강화 돕는다

도,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도내 소공인 간 연계 협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2023년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다.

소공인 비중이 높은 전북 제조업의 특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농생명 및 식품산업 같은 도내 주력산업 내 이업종과의 연계를 촉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역센터는 지역 소공인의 성장 지원 및 센터 간 연계·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소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돕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집적지 실태조사, △프러덕트교육, △프로젝트 매니

저양성, △산·학·연 연계사업 등이다. 광역센터 운영은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회장 이인호)가 맡는다.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는 전주 금속가공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9년째 운영했으며, 광역센터로 확대해 도내 소공인에 대한 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부터 총 5.35억원의 사업비(국비 2.35억, 도 1.5억, 전주시 1.5억)로 도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이번 광역센터 선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공인 혁신성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기업 경영활동 저해 115건 발생

전북도 ‘기업활동 지원·민원처리 실태 특검감사’ 결과

전북도가 기업경영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처리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특검감사’ 결과를 통해 규제개선 등 행정상 처분 115건, 창업기업 등에게 1억7,900만원 환급, 기업민원 부적정 처리 등 관련 공무원 6명을 훈계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기업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 인·허가 민원처리, 기업 자금 지원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 실현’에 기여하고자 올해 3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31일간) 도 본청, 14개 시·군 및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첨유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7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

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는 2023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관련 규제 개선사항 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자료를 수집·분석함과 동시에 현장행정을 통해 기업인, 관계기관 등의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감사 중점사항을 정해 기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결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감사결과 규제개선 분야, 민원처리 분야, 자금지원 분야 등 총 3개 중점 분야에서 부담금 면제업무 소홀 및 기업민원 처리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115건의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창업기업 등에 부과된 총 1억 7,900만원의 부담금 등을 환급하도록 통보하고, 기업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 6명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전주매일 캠페인